



# 한반도 포커스

##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한반도

2

권두언: “2010년, 결단의 해”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5

북한의 신년사: 의미와 함의  
이봉조 (경남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9

신년공동사설로 본 북한의 2010년 전망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2

2010년 북한경제 전망: 신년공동사설과 화폐개혁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5

신년공동사설과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전망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2010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남북관계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2

〈해외로부터의 시각〉

Obama's Nobel Speech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cott Snyder (Director, Center for U.S.-Korea Policy of The Asia Foundation)

## 권두언: “2010년, 결단의 해”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leesh@kyungnam.ac.kr

한반도와 한국인에게 있어 2010년은 역사적 의미가 유별난 해다. 100년전 주권상실과 이에 이어진 식민통치라는 뼈아픈 역사가 있고, 60년전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 개시의 역사도 있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지적하듯이, 한국전쟁은 일제 식민통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하나의 억압적 역사가 또 다른 폭력적 역사를 잉태한 것이다. 이 두 역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재에 고스란히 투사되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통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 폭압적 역사를 되새기면서 그 역사가 강제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적 잔영을 제거한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미래 역사를 열기 위해 일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협력안보메커니즘 구축 등 탈냉전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당사국들인 북한, 미국, 한국 3국이 대타협의 정신으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절호의 시점이 바로 2010년이다. 핵심 당사국들의 국내 정치적 환경과 다가오는 정치일정 및 지난 해 힘들여 축적해온 동력을 감안할 때 금년을 놓치면 앞서 열거한 핵심 과제들은 다시 한 번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일본 하토야마 내각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일로부터 구해야 할 협조와 정책조율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은 호기가 다시 오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결단의 절박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하

나의 과제가 다른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가 ‘포괄적 접근’이나 ‘일괄타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더불어 의제의 포괄성도 중요하지만 ‘접근의 포괄성’이라는 차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거래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특히 남·북·미 3국이 동시 행동적으로 자신에 해당되는 몫을 담당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게임이 성립되고 순탄하게 완료되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 미국, 한국은 금년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북한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불길하게 다가오는 국가들이 있는데 파키스탄과 미얀마다. 그리고 그런 류의 국가를 우리의 반쪽이라고 여기고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암울한 전망을 떨치기 어렵다. 북한에게 중국과 같은 개방의 길, 박정희식 개발독재나마 60년대 남한과 같은 근대화 노선은 아예 불가능한 길인가?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미얀마와 같은 국가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인가? 북한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계시장적 여건과 국제체제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남한의 근대화 모델과 중국식 개방 모델을 적절히 혼합한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근대화 모델’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과 남한은 각각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북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미얀마 같은 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체제위협이 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및 국제사회의 압박

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체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해는 아마도 금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은 북한의 내적 역량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돌파구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경우처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진입할 때 가능한 일이며, 이는 북한이 현재와 같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고집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김 위원장은 핵폐기라는 결단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노선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

북미관계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이 금년에 결단해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핵없는 세계’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해가 금년이다. 4월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에 열릴 NPT 재검토 회의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계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금년 여름이 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문제에 다시 골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보즈워스 특사 방북으로 쌓인 동력이 사라진다.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공화당 의원들의 정치공세가 날로 드세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결단을 서둘러야 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이행하는데도 금년 초를 넘기면 오바마 행정부가 맞장구를 칠 수 없는 정세 속으로 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절박성이 더하다. 김 위원장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비핵화의 핵심 의제들을 미국과 조율한 이후에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이다. 제재를 주도하고 국제적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이고, 협상을 보이코트할 수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이로 인해 실제 중국의 지분이 증가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정책조율과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이지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같은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과 실제 대응이 전체적인 판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고도 절박하다.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채택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잃어버린 10년’이 된 셈이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강경일변도로 밀어부친 대북 레짐전환 정책은 ‘제네바 합의’와 KEDO를 파산시키고, 결국 북한을 실질적 핵국가로 만드는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전 북미합의 정신을 되살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청산하고 평화협정과 관계정상화 협상을 개시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허용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방과 근대화 노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6자회담이 재개되어도 평화협정이나 관계정상화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의 추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실상의 개시 선언이 될 것이며, 정치적 의지가 실릴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한반도나 인근 지역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을 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

화증진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남북간에는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따라 이에 합의한 바가 있으므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하면 현실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에는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북미협상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결단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폐기론이나 북한 급변사태(collapse) 시나리오를 폐기해야 한다. 북핵 역사와 비핵화 협상과정을 돌아보면 선택폐기론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6자회담의 정신이나 합의들에 선택폐기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유혹을 떨쳐야 한다. 급변사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근본적 문제와 더불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엄청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화해와 협력에 의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모든 통일방안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남북간의 모든 합의들에서 강조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렇고, 2005년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포착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비핵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하였듯이,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들을 돌아볼 때 금년이 정상회담을 할 적기다. 6자회담과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본래적으로 국제성과 특수성을 이중적으로 갖는다. 어느 한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남북관계를 해치거나 우리 내부의 갈등을 야기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국제성이 두드러지는 데, 이를 남북관계만의 특수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남북정상회

담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개성 비밀 접촉이 말해주듯이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핵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핵포기,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를 선결요건인 듯 앞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 만나면 반드시 다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되지, 민감한 이슈들을 내세우는 것은 대화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회담 성과와 관련하여 자승자박의 의미도 갖을 수 있다. 회담 개최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어떤 북한을 원하는가? 북한의 미래는 어떠해야 바람직한 통일의 상대가 되는가? 이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과제이자, 동북아의 미래 지역질서와도 관련된 질문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빈곤에 허덕이면서 부단히 우리를 적대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북한을 원하는가, 아니면 핵폐기를 통해 개방과 근대화를 추진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탈바꿈한 북한을 원하는가? 선택은 자명하다. 그 선택을 위해 북한, 미국, 한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정치적이고도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 2010년 같은 호기는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④

## 북한의 신년사: 의미와 함의

이봉조 (경남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bjrhee@kyungnam.ac.kr

### 신년사 형식의 변화과정

북한의 신년사는 1946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을 맞으면서 전국 인민에게 고향”이라는 연설을 한 것이 최초였다. 그 후 김일성의 신년사는 매년 계속되었다. 다만 권력투쟁과 숙청이 진행되었던 1957년과 1966년~1970년까지 5년 동안은 김일성의 신년사 없이 로동신문의 ‘신년사설’이나 ‘신년 축하연에서의 연설’로 대신하였다.<sup>1)</sup> 1987년에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새해를 앞두고 12월 30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행한 ‘시정연설로 신년사를 가름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신년사는 일정한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신년사, 축하문, 연설, 신년사설, 공동사설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김일성 생존 시에는 신년사의 형태로 김일성의 육성으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이 로동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김일성 사후, 즉 1995년 이후에는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이 직접 신년사를 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 당보(로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낭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1998년도에는 공동사설에서 청년보(청년전위)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는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것에 따른 조치, 즉 김정일의 공식 직함이 당 총비서와 인민군 최고사령관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3개 신문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북한은 1946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모두 신년사 36회, 연설 7회, 축하문 1회, 신년사설 5회, 공동사설 16회를 발표하였다.<sup>2)</sup>

### 신년사의 성격과 의미

북한은 신년사를 “당과 국가의 수반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행하는 공식적인 연설이나 그 연설문”이라고 정의한다.<sup>3)</sup> 당해 연도 국정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수령의 공개적·강

북한의 신년사는 당해 연도 국정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수령의 공개적·강령적 교시로서 일 년 동안의 분야별 정책추진과제를 직접 밝힌다는 것 이외에도 이를 토대로 모든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신년사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령적 교시로서 일 년 동안의 분야별 정책추진과제를 직접 밝힌다는 것 이외에도 이를 토대로 모든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신년사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신년사는 북한 주민에 대한 통치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년사가 발표되는 1월 1일 아침에 전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신년사를 청취해야 하며, 각 시·도 및 단체 그리고 공장·기업소 별로 신년사 관철 결의 모임과 궐기대회를 거의 한 달 동안 진행한다.

그러므로 신년사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주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과업 제시인 셈이다.

김일성 생전 신년사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주요 신문의 전면을 장식하였으며, 사후에 신년사를 공동사설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북한에서 언론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언론을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①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자적 역할, ②조직동원자적 역할, ③문화교양자적 역할, ④대적투쟁·대적언론전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 ⑤대외선전과 외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sup> 북한 신년사가 ‘당과 국가의 수반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국정전반의 지표 제시인 만큼 노동신문을 중심으로 북한

신년사를 내용 구성면에서 보면 ‘경제’ 분야가 공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사상’과 ‘내부결속’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모든 언론들은 연간 지속적으로 신년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도와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신년사를 외워야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신년사의 기본적인 체계라도 숙지해야 한다.

북한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년사 또는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의 정세를 분석 전망하고 지난해와의 차이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 지금은 북한 관련 자료가 다양하고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지만, 김일성 사망 이전만 하더라도 신년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신년사는 북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일 뿐 아니라 정치·경제·군사·대남·대외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의 육성으로 발표되었다는 점

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신년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신년사와의 비교이다. 발표에 걸린 시간, 분량(글자 수), 제시된 과업 등 모든 것을 우선 전년도와 비교한다. 북한 신년사는 일반적으로 △서론, △전년도 평가, △새해 추진과업,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정일 시대 신년사의 특징

김일성 시대에서와 달리 1995년 이후 소위 김정일 시대에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가 발표되면서 신년사의 맥은 이어 지고 있지만 김일성 시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의 신년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김일성 시대 신년사와 달리 김정일 시대 신년사는 공동사설의 형식으로 발표되면서 중량감이 많이 떨어졌다. 더욱이 김일성 주석처럼 직접 신년사를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는 데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계획이 희망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일 시대 신년사는 공동사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신년사의 구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동사설은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당과 군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났으며 ‘주체사상 4대원칙’이나 ‘3대 혁명력량 강화론’과의 연계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공동사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신년사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이를 통해 당면과제인 유신통치의 부각이나 김정일 중심의 권력체제 강화 등에 신년사를 활용하는 것은 훨씬 용이해졌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내외정세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관성이 강조되는 김일성 시대의 신년사 보다 공동사설의 형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신년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새해 추진과업'이다. 이는 한 해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시정지침과 중요한 대남 및 대미제안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대강을 밝히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일종의 국정지표라 할 수 있다. '새해 추진과업'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개요, △사회주의 건설, △대남·통일, △대외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시대에 '사회주의 건설' 부분이 내용구성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아울러 김일성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대남·통일'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김정일 시대에는 '대남·통일' 부분이나 '대외관계' 부분의 비중이 김일성 시대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일성 사후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 부분 언급 시 '경제' 분야를 먼저 언급했던데 비해 김정일은 '사상' 분야를 먼저 언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0년 공동사설에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분야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sup>6)</sup> 내용 구성면에서 보면 '경제' 분야가 공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사상'과 '내부결속'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김정일 정권이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때마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3대 진지 강화'(1996년), '붉은기 사상'(1997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1999년), '4대 제일주의'(2002년), '선군사상'(2003년) 등 다양한 통치노선을 제시했던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김일성은 그동안 '사회주의 건설', '대남·통일', '대외관계' 등 '3대 혁명력량' 부분을 예외 없이 모두 언급한데 비해 김정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은 대외관계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정세나 대남 및 통일 환경의 변화가 '3대 혁명력량 강화론'을 계속 견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년사에 곧 바로 반영된다.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으며,<sup>7)</sup>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2003년에는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펼치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선군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체계가 최초로 공

김정일 시대의 신년사의 주된 흐름은 '선군령도'라는 통치방식과 그 목표로서 '강성대국 건설'로 압축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와 달리 공동사설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내용의 일관성은 떨어지나 내외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년사에 대한 북한 주민의 흡수력과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새로운 용어로 '총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동사설에 등장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선군사상'을 새로운 통치이념의 하나로 설정하고 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통치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펼치자"라는 공동사설을 통해 선군정치 체제의 확립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선군령도' 10년 만인 2009년 4월 다시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에 국가주석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규정하였다.<sup>8)</sup>

1999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새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였다. 즉 김정일 시대가 지향하는 목표가 사상·군사·경제대국을 이루는 것, 즉 '강성대국 건설'임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 즉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 노선 하에 총진군할 것을 강조하였다. 2002년에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등 ‘4대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2009년에는 “총진군의 나팔 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이 사설은 모든 초점이 김일성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는 ‘제2의 천리마 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김정일 시대의 신년사의 주된 흐름은 ‘선군령도’라는 통치방식과 그 목표로서 ‘강성대국 건설’로 압축될 수 있다. 김일성 시대와 달리 공동사설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내용의 일관성은 떨어지나 내외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년사에 대한 북한 주민의 흡수력과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새로운 용어로 ‘총적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김일성 시대 신년사가 ‘대남·통일’분야와 ‘대외분야’에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김정일 시대에서는 ‘사상’이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내부용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과거보다 수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전환기적 상황에 놓인 북한의 상황 인식과 대응방향이 담겨 있다. 동시에 대남·대미 관계에서는 유화노선 지속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공동사설에서 나타난 특징을 철저히 점검하여 새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대전환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NOTES

- 1) 한국전쟁 중 있었던 1953년 당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장으로 김두봉이 ‘신년사’를,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축하문’을, 그리고 로동신문은 ‘신년사설’을 발표하였으나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신년사로 간주하였음.
- 2) 연설 7회는 1954~1956, 1958~1959, 1969, 1987, 축하문 1회는 1952, 신년사설 5회는 1957, 1966~1968, 1970, 공동사설 16회는 1995~2010.
- 3)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912
- 4) 엄기영, 『신문학 개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pp. 23~26.
- 5) 최정석, “김정일 시대의 신년사와 통치강령 변화에 관한 연구” (2006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76~80. 참조.
- 6) 1995년 공동사설에서 ‘경제’ 분야 우선 언급 이후 15년 만에 처음 언급.
- 7) 2003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사회주의 강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김정일 동지의 활동은 선군혁명령도로 일관되어있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독특한 령도 방식이다”라고 김정일 시대 통치형태의 특성을 밝히고 있음.
- 8) 200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3조.

## 『현대북한연구』

■ 제12권 제3호 (2009)

-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 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 김중욱
- ‘민간인 중심 지역방위체계’ 형성을 위한 당(중앙) 군사위원회 활동 / 김병욱·김영희
- 북한의 협상행태에 대한 인지·심리적 해석 / 한승훈
- 북한의 저작권 전담 행정기구 설립에 따른  
남북 저작권 교류의 환경 변화 연구 / 신현욱
- 북한 기상기술력 평가와 남북한 기상협력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이유성·류민우



## 신년공동사설로 본 북한의 2010년 전망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kap.sik@kyungnam.ac.kr

올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2010년 북한의 정책 목표는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관계개선을 통한 강성대국 진입의 ‘도움닫기’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조기화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 북한체제에서 강성대국 진입과 후계체제 구축은 동전의 양면이며, 따라서 이 두 과정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신년공동사설은 2009년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진 극적인 전환의 해”로 평가하였다. 즉 작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개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에 의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 ‘광명성 2호’ 발사, 제2차 지하 핵실험, 5.1절(국제노동절)과 각종 행사의 ‘축포야회’ 등의 성과에 기초한 평가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강성대국에로의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까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올라섰고 마지막 관문인 경제강국의 도약대까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2010년에는 그 도약대를 딛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도움닫기가 북한의 총적 투쟁방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년공동사설은 2010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2010년에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이는 것”을 대내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북한주민들

이 “사회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함으로써 2009년 250일 동안 진행된 노력동원으로 피곤한 주민들을 위무하고, 지난 11월 30일에 단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이 2010년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의 정책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는 신년공동사설의 제목과 형식의 파격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동안 신년공동사

2010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 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정책에서의 보수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화 조치와 관련해서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당의 강화’가 다시 삽입된 것은 보수적 경제정책 강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설의 제목은 거의 다 정치사상적 구호형식이었다.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2008년)”,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2007년)”. 설사 경제 중심이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추상적이었다. “충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2009년)”,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2006년)”. 그런데 올해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결정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을 제목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신년공동사설의 분야별 배열순서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치사상, 국방력, 경제 순이었는데, 올해에는 경제, 사회, 정치사상 순이었고 국방공업은 아예 배제하였다. 이는 대내적 환경을 반영한 것이고 그만큼 경제와 인민생활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북한은 대내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정책에서의 보수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계획규률, 재정규률, 노동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그리고 금년 1월 1일 전격 단행한 북한 내 외화사용 전면 금지 등과 같은 보수화 조치를 올해에도 계속 강화해 자본주의 요소를 차단하고 계획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후계구도를 시사하는 언급은 없었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후계구축이 시급함에도 이러한 언질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후계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만 공식적 후계자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복원하겠다는 북한당국의 강한 의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보수화 조치와 관련해서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이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을 눈여겨봐야 한다. 물론 이 대목을 의례적 표현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의 강화와 당조직의 역할 제고를 같이 언급했던 시기는 2010년, 2007년, 2006년이었고, 주로 당조직의 역할 제고만 제시했던 시기는 2009년, 2008년, 2005년이었다. 그러면 2006년과 2007년이 왜 중요한가?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2년 7.1 조치 이후 2003년 박봉주 총리가 기용되어 내각 인사권 위임, 당·정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당·군 경제사업 축소, 노력동원 금지 등 일련의 개혁성

조치를 단행했는데, 2005년 이후 당이 이 개혁조치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고 마침내 2007년 4월 박봉주 총리는 해임되었다. 이 시기부터 양곡전매제 시행(2005년 10월), 부동산 전면 실사(2006년 4월), 종합시장 통제 개시(2007년 10월) 등 경제정책이 보수적으로 회귀하였다. 따라서 신년공동사설에서 ‘당의 강화’가 다시 삽입된 것은 보수적 경제정책 강화 의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는 후계구도를 시사하는 언급은 없었다. 김정일의 건강문제를 고려할 때, 후계구축이 시급함에도 이러한 언질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후계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가정과 사회에 기반을 닦는다는 이립(而立)에도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계승하기에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경우 대내외적 환경의 상대적 호조조건과 김일성과 그의 측근들의 전폭적 후견에도 불구하고 당의 말단부원으로부터 자기의 지지기반을 강화하여 현재의 수령 지위에 올랐다. 어쩌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도 더 혹독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만 공식적 후계자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북한의 모든 정책은 결국 후계구축 과정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후계구도와 관련된 내용은 우회적이고 상징적 차원이지만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권력승계가 성공하려면 ‘승계의 제도화’와 ‘승계의 정당화’가 필요하다. 승계의 제도화는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한다. 승계의 정당화는 북한 인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양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정책면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먼저, 승계의 제도화이다. 북한은 작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체계를 정비하였고, 이제 남은 것이 2012년 7차 당대회에 대비한 당의 쇄신이다. 6차 당대회가 개최된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배치하고, 특히 당 정치국과 당 비서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당 중앙위원회 재구성도 대대적 세대교체를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 번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이 높여야 한다”는 언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어나가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유능

후계자의 업적 중 중요한 것이 지도사상에 대한 해석권이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첨단돌파전’,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 등 선군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2012년 7차 당대회에서 후계자가 공식화된다면 그는 경제적 성취와 선군사상 해석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한 청년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예사롭게 볼 수만은 없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새세대인 혁명 3·4세대의 권력 중심부 진입이 임박한 것이다. 부처에 따라서는 이미 새세대의 상당수가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승계의 정당화이다. 작년 1월 초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후 7월경부터 인민반에서 그의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고, 그를 찬양한 ‘발걸음’을 공개석상에서 합창한다는 전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

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후계구축 과정에서 후계자의 성취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올해에도 김정은의 직·간접 지도 하에 노력동원이 재개될 것이고, 김정일은 경제분야 현지 지도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후계자의 업적 중 중요한 것이 지도사상에 대한 해석권이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첨단돌파전’,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선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 등 선군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2012년 7차 당대회에서 후계자가 공식화된다면, 그는 경제적 성취와 선군사상 해석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다.

북한은 끝자리가 5나 10으로 떨어지는 ‘정주년(꺾여지는 해)’을 매우 중요시한다. 올해 대외(대남)분야에서는 「6.15 공동선언」 10주년, 한국전쟁 60주년, 광복 65주년 등이 해당된다. 북한은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복원의 의지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 기념일에 즈음하여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미간, 남북간 입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노동당 창건 65주년과 6차 당대회 개최 30주년을 맞는 10월 10일의 “경사스러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성”은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

## 2010년 북한경제 전망: 신년공동사설과 화폐개혁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내 부문의 핵심 화두로 ‘인민생활’을 지적했다. 필자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인민생활”에다 “민심”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키면 북한 지도부의 고민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동사설의 제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루자”라는 제목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것도 그러하지니와 힘을 넣어야 할 분야로 경공업과 농업을 적시했는데 결국 식량과 생필품 등 ‘인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혀진다. 종전의 공동사설 제목은 매우 추상적이고, 또한 “잘해 보자”, “열심히 하자”는 식의 정치적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도 흥미할 만하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또한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초에서 ‘인민생활’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설의 ‘제목’ 수준으로 지위가 대폭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실패로 판명된 직후인 1994년, 즉 북한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그 해에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서 종전의 중공업 우선주의를 잠시 접어두고 ‘경공업, 농업, 대외무역 제일주의’를 내세운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그동안 공동사설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분야로서 거듭 강조했던 국

방공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 즉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국방공업을 사실상 배제하고 그 대신 경공업과 농업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더라도 그 무게가 느껴진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인 총공세”라든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일대 공세가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과 군에게 제시한 과업도 인

왜 북한은 느닷없이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을까? 조금 세밀하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해에 더욱 피폐해졌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삶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민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군에 대해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선군조선의 밑뿌리인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에 대해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라고 전제하고,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당사업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당의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의 일군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민심’을 지적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일까. 우선 대내적으로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자원 배분에서 이들 분야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주장, 외부세계로부터의 자원 획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면서 향후 대외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이번 공동시설에서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왜 북한은 느닷없이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을까? 북한의 경제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일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한 내부 결속이 그 근저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해에 더욱 피폐해졌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장에 대한 단속이 2009년에 더 심해졌고, ‘150일전투’다, ‘100일전투’다 해서 사회적 동원과 통제는 강화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11월말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주민들의 속은 새키땅게 타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민심이 흉흉해질대로 흉흉해졌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화폐개혁 이후의 사태 전개는 북한 당국이 매우 당황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 당국은 신·구화폐의 교환한

도를 잇따라 확대했다는 외신보도가 있다. 처음에는 1인당 10만원이었던 것을 15만원으로, 이어 30만원으로, 다시 50만원으로 계속해서 인상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자산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 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1로 바꾸는 조치가 나온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새로운 국정가격과 국정환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국정가격이 발표되었는데 다시 변경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다. 어찌되었든 당초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화폐체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후폭풍을 몰고 오는 데 대한 우려와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공급의 확대 여부로 귀착된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북한산 쌀과 북한산 경공업 제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만 시장도 뿌리 뽑을 수 있고, 외화도 필요 없게 된다. 이번의 신년공동사설은 지난해의 화폐개혁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는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화폐개혁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화폐개혁 조치의 보완·완성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 올 1월 1일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해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에 해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개인이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국가가 몰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기관이 수출을 통해 확보한 외화도 24시간 이내 은행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말 화폐개혁 직후 조선중앙은행이 외국돈 유통을 전면 금지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주민들에 대해 외화 사용 및 보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외화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주민들은 가치가 폭락한 북한 원화를 기피하고 가치가



높아진 외화를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현재 북한에 만연되어 있는 달러화(dollarization), 위안화(yuanization) 현상은 구조적인 것이다. 달러화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국내 자원의 고갈, 대외의존도 상승의 화폐적 표현이다. 북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실물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달러화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시장에 대한 단속과 마찬가지로 외화사용에 대한 통제는 필연적으로 암거래의 확대를 낳는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특권층과 권력기관은 단속과 통제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이다. 외화 사용과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을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달려 있다. 경공업·농업의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민심을 잡는 것도, 화폐개혁을 통해 물가를 잡고 재정을 늘려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는 것도 결국은 대외관계에 달려 있다. 2010년도 북한경제도 경제위기 이후의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대외관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오히려 이들의 호주머니는 뒷돈과 뇌물로 가득 채워진다.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 사회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결국 문제는 공급의 확대 여부로 귀착된다.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북한산 쌀과 북한산 경공업 제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만 시장도 뿌리 뽑을 수 있고, 외화도 필요 없게 된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내세운 대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도 이룰 수 있고, 나아가 계획경제도 정상화된다. 결국 이번의 신년공동사설은 지난해의 화폐개혁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는 아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화폐개혁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화폐개혁 조치의 보완

·완성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신년공동사설이든 화폐개혁이든 북한 당국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대내적으로 보면 성과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인민생활 향상을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금속·전력·석탄·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공동사설에서는 4대 선행부문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이 중공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994년부터의 혁명적 경제전략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유아무야되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설령 경공업·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현재 극심한 식량난·전력난·원자재난에 시달리는 조건 하에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공동사설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구호만 요란하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케케묵은 기존의 방식만 줄줄이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경제협력을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달려 있다. 경공업·농업의 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향상시켜 민심을 잡는 것도, 화폐개혁을 통해 물가를 잡고 재정을 늘려 시장을 억제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는 것도 결국은 대외관계에 달려 있다. 2010년도 북한경제도 경제위기 이후의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대외관계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⑤



## 신년공동사설과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 전망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jc@kinu.ac.kr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의 근본문제로서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강조하였다.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핵심과제로 한반도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세부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비핵화를 제시한 것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북한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체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의 기본입장이 반복되었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점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체제 문제에 비중을 두으로써 향후 대미협상에서 이 문제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북한은 대미협상의 핵심은 북미 평화협정에 의해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북미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무효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향후 대미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양면 전략을 구사해 왔다. 첫째,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난 해 북한과 중국 고위층의 상호방문이 이어졌으며, 중국이 북한에게 대규모 지원과 경제협력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소원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생명줄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미견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의 기본입장이 반복되었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핵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점치게 하는 요소이다.

둘째,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상국면을 재개하기 위해 화해 제스처를 구사했다.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행태는 낯익은 것이다. 북한은 1993년 북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위기고조 후 협상국면으로 진입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다시 위기를 고조시키고 협상국면을 유도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제네바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2차 북핵위기 후 6자회담에 의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

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짜려하고 있다.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추가적인 위기고조 행위를 자제하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게 대화의 신호를 보냈다. 북한은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미국측과의 접촉 및 북한측 인사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북미대화의 계기를 찾고자 했다.

북미대화의 기회는 우연히 찾아 왔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접촉이 진행되었다. 2009년 8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여기자 2명을 석방시킴으로써 북미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제네바합의」를 타결시키고 북미관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임기 말년에는 평양방문을 고려하기도 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여기자의 석방문제에 집중되었지만 북미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였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자 석방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북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미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9년 12월 미국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었다. 미국은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제도 핵 문제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입장이 분명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미국은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 이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미 접촉이 북한을 제외한 5자협약에 의해 진행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도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시 북미 양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본 뒤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비핵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대미접촉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에 대해서 절반의 성과이자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보스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친서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답신이 없었지만 북미접촉 초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스워스 대표에 의하면, 북한은 6자회담의 중요성과 「9.19 공동성명」의 핵심적 역할을 수용했다고 한다. 북한이 6자회담의 무효를 선언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핵시설을 가동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북한이 6자회담 및 「9.19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를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며, 북한이 언제 어떻게 6자회담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다는 보스워스 대표의 언급은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보스워스 대표는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스워스 대표는 4개국(중국, 북한, 한국, 미국)이 평화협상에 참여할 것이며, 이를 모든 참가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틀로 4자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이해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보스워스 대표는 비핵화 논의의 재개시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이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북한이 동의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단계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이를 협상 카드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했다.

또한 보스워스 대표는 북미 추가 대화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까지 유엔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보스워스 대표의 방북에 의해 북미의 기본 입장과 대화형식, 의제 등에 대해 일종의 탐색전이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북핵문제가 위 기국면을 넘어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의 협상은 6자회담,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포럼의 3가지 틀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가지 협상틀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의제도 상호 연계됨으로써 협상틀과 의제가 종횡으로 교차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보게 될 것이다.

우선 뉴욕 채널이나 베이징 등 제3국 또는 북한 측 고위급 인사의 방미 등을 통해 북미대화의 수준과 시점, 6자회담과의 관계,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미대화과 6자회담을 병행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경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이다. 북미관계 진전에는 미국의 대북경제지원,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진전의 징검다리로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논의될 수 있다.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하면

서도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의 명분과 실리를 제공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증명하고자 할 것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특히 핵시설의 불능화 재개, 검증방안 합의, 핵폐기의 이정표 작성 등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검증과 핵폐기 일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고 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보스워스 대표가 4자회담을 한반도 평화포럼의 틀로 제시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 완전히 동의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4자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4자회담을 실질적으로 북미협상 위주로 이끌어가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태, 평화협정의 보장방법, 한미동맹의 위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입장 대립과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합적 국면에 대해 우리는 주도면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한미공조를 필두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대북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상호관계와 추진일정, 세부과제 등에 대해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포괄적 접근과 북한식 일괄타결방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진 사이의 최대공약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관련국의 합의를 얻는 과정이 될 것이다. 

## 2010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남북관계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wylee@kyungnam.ac.kr

###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남북관계

2010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공동사설(혹은 신년사)과 차이가 있다. 제목에 경제부분을 언급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그 동안 제목은 주로 정치나 사상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장이나 발전을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분 추상적이었던 반면에 올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경공업과 농업을 지적하고 인민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2010년도 신년공동사설의 특이함은 남북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공동사설에서는 2010년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돛이 되는 해”로 규정하면서 2000년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으로 개념 짓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2009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2010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이다. 북한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 아래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한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와 적지 않게 차이난다. 첫째, 남한 정부에 대한 태도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바뀌었다. 둘째, 2009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넷째, 그 동안 지속되었던 미군철수 등 반외세 관련 언급이 없다. 다섯째, 특정한 구호가 없다

넷째, 남북교류와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민족의 이익을 구현하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철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범한 인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연도별 공동시설의 남북관계 부분의 특성(2005~2009)

연 도	핵심내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정상회담을 '장군님'의 업적으로 칭송</li> <li>• 민족공조를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공조로 세분화</li> <li>• 미군철수 강조 등 외세공조 배격</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 주장</li> <li>•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협의 3대 애국운동 주장</li> <li>• 사회문화 교류협력 평가</li> <li>• 미군철수 투쟁 강조</li> <li>• '반보수연합' 구축을 통한 자주통일운동 요구</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중사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 제시</li> <li>• 미국의 '간섭과 방해' 배격하고, 미군철수 투쟁 강도 강화 요구</li> <li>•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통일운동의 통하여 '반보수 대연합' 촉구</li> <li>• 대통령 선거에서 반 한나라당 운동 강조</li> <li>• 선군정치와 민족문제 연계</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4 선언으로 대결의 잔재 극복되고 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이 열렸다고 평가</li> <li>•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는 구호</li> <li>• 10·4 선언 이행을 통한 다방면 교류 강조</li> <li>• '친미시대와 대국배격' 행위 거부, 미군기지 철폐, 합동 군사연습 폐지 주장</li> <li>•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법률 제도의 정비 요구</li> <li>• 남북 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추진</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운동이 남한의 정권교체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평가</li> <li>• 남한정부의 정책을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으로 규정</li> <li>• '우리민족끼리' 정신 아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li> <li>• "사대매국적인" 남한 정부의 "파쇼정치"를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요구</li> </ul>

### 신년공동시설 남북관계의 특징

2000년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중시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등은 그 동안의 신년공동시설과 일맥상통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와 적지 않게 차이난다고 할 수 있다(〈표〉 참조).

첫째, 남한 정부에 대한 태도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도의 경우 '사대', '파쇼'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였고, 심지어 반정부 투쟁을 시민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6.15 선언의 부정', '외세와 결탁', '대결 소동' 등을 경계하고 있을 뿐이다. 비판은 그 동안의 행동에 대한 평가지만 경계는 일종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를 저해하

는 법과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형식적인 느낌이 없지 않다. 이것은 당국자 회담 등을 의식한 표현으로 북한이 현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9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에도 북한은 정상회담 및 남북공동선언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라고 주장하여왔고, 북한이 민족이나 통일문제에 주도적이었다고 이야기하여왔다. 그러나 올해 공동시설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대범한 조치를 시행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식의 말은 한 적이 거의 없다. 당위의 차원과 사실의 차원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대남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보다 구체적인 차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차원에

서 적극적인 교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그 중심에는 경제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의 공동사설에서는 각 계층의 '대왕과 접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이 사회문화 교류협력, 특히 인적 교류에 소극적이었고 직접적인 접촉도 꺼리는 경향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면서도 접촉확대에 따른 주민 동요 등을 우려하였던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민간부분의 대북지원도 축소되고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위축으로 경제적 대가도 줄어들면서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010년 신년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으며,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그 동안 지속되었던 미군철수 등 반외세 관련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자주통일의 필요성이나 반전평화 주장은 계속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정도가 과거와는 다르다. 반외세와 미군철수 주장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에도 빠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2010년 공동사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 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반미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정한 구호가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남북관계와 관련 '3대공조', '3대애국운동', '3대과업' 등 기본 구호를 설정하여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명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두 번의 공동선언이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구호가 없다는 점은 남한내 통일운동에 대한 입장의 변화 여부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호는 운동적 차원에서 유용하기 때문인데,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남한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축소되었다는 것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전망

2010년 신년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단히 적극적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으며,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2009년도의 억류 근로자 송환, 개성공단 관련 강경 조치 백지화, 현대회장 면담과 관광 재개 의사 표현, 조문 사절 방한 등 북한이 취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하여 명분이나 주장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주로 하였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 특히 그것도 '정의있다'는 식의 상대주의적 평가를 내린 적이 드물었다. 이것은 북한이 평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남한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분에서도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인적 교류를 포함하여 민간부분의 협력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북한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09년도에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신년공동사설에서 명문화하였



다는 것은 당분간 북한이 대남관계 개선 이외에도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북미관계의 진전이라는 외적 요인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대내적 요인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북한의 경제 현실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공동사설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시민단체 중심으로 10년 넘게 지속해온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의약품이나 기초 생필품 등의 대남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현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신년공동사설을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 사업들의 지속은 물론이고 금강산·개성 관광 등 중단된 협력사업의 재개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5년, 10년과 같이 짝어드는 해를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10년은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점에서 ‘수뇌상봉’과 같은 대담한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신년공동사설을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 사업들의 지속은 물론이고 금강산·개성 관광 등 중단된 협력사업의 재개에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당국간 회담을 물론이고 민간부분의 교류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5년, 10년과 같이 짝어드는 해를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10년은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라는 점에서 ‘수뇌상봉’과 같은 대담한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이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발전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2010년도 통일과 관련하여 ‘신사고’를 강조하

였고, 통일부 장관도 최고위급을 포함하여 모든 단위의 남북회담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수사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은 남북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유에 어쨌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성을, 그것도 이례적인 수준에서 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현실화시키려는 남한 당국의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 입안 및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북한 당국의 입장 변화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자찬하는데 만족한다면 모처럼 잡은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해외로부터의 시각〉

## Obama's Nobel Speech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Scott Snyder (Director, Center for U.S.-Korea Policy of The Asia Foundation)  
ssnyder@asiafound-dc.org

Ambassador Stephen Bosworth's long-awaited visit to Pyongyang on December 8-10 marked the first high-level direct conta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Bosworth carried a letter from President Obama to Kim Jong Il, but the contents of that letter have not yet been released. However, Ambassador Bosworth's declared upon his return from Pyongyang that the two sides had reached a "common understanding with the DPRK on the need to implement the six party joint statement and to resume the six party process." The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affirmed Bosworth's statement on December 11, but mentioned the negotiation of a peace agreement,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economic and energy assistance as the main items of the talks.

At the same time that Ambassador Bosworth was in Pyongyang, President Obama flew to Oslo to deliver a speech on December 10th accepting the Nobel Peace prize. Although Obama's speech was not about North Korea, it did contain references to North Korea clear statements on a number of subjects of relevance to the future of the U.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North Koreans would do well to interpret the letter from President Obama and

conversations with Ambassador Bosworth in the context of broader themes President Obama has emphasized in speeches like the one he made in Oslo, which reveal important perceptions and principles likely to inform the President's own views regarding North Korea related issues.

Although the bulk of President Obama's Nobel speech grappled with principles for underlying the concept of a "just war" and "the imperatives of a just peace," the speech touched on a number of issues that have direct relevance to the U.S.-DPRK relationship. Specifically, President Obama suggested three ways to build a just peace, each of which are directly relevant to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rst, Obama outlines the need to "develop alternatives to violence that are tough enough to actually change behavior"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rule-breakers as a means by which to avoid war. He specifically mentioned North Korea along with Iran, stating clearly that "it is also incumbent upon all of us to insist that nations like Iran and North Korea do not game the system."

Obama argues that "sanctions must exact a real price," and that the means by which to exert effective pressure through sanctions i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Obama administra-

tion has already shown in April and June of 2009 that it tak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ir implementation seriously as a means by which to apply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at the intent is to apply sanctions in ways that have “bite.” Obama’s statement suggests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ously promot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as a means to pressure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on table through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A potential obstacle that stands in the way of the president in pursuing this task is the capacity and willingness of individual nations to implement sanctions in such a way as to exact a “real price,” especially when a sanctions path might heighten bilateral tensions between the sanctioning state and the target state. Specifically, the views of China on sanctions are not in line with Obama’s recommendation. But Obama’s emphasis on sanctions as a means by which to promote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or by which to punish rule-breakers, is a distinctive element of his approach. North Koreans would do well to take note that this administration thus far appears to see sanctions as an important-and viable-component of its approach to North Korea.

Obama’s description of North Korea as an international rule-breaker provides a clear frame of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on’s view of the North Korea problem to date. The Obama administration perceives the fundamental problem a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not necessaril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r with South Korea. This explains

why the administration has sought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hesion (through emphasis on the six party talks and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respectively) as a main component of its approach to North Korea.

Obama administration efforts to discipline North Korea as an international law-breaker will clearly chafe against North Korean sensitivities, given that the North feels unjustly treated in its initial efforts to seek international justification for its missile launch. An even bigger problem is the North Korean insistence on international affirmation as another tool by which to affirm its legitimacy internally, particularly during preparations for a leadership succession in Pyongyang.

*Obama mentioned specifically his objective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made itself a direct challenger to that objective through its decision to conduct a nuclear tes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its commitment to dialogue but is also insisting on North Korea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 objective that fli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own ideology and conception of itself as an exceptional state not bound by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behavior.

Second, Obama mentioned the need to hold governments to account for brutalizing their own people, but did not mention North Korea in specific terms. Although Obama asserted American support for the rights of the oppressed, he implied that one possible means of creating the conditions for internal change is “engagement with repressive regimes. . . No

repressive regime can move down a new path unless it has the choice of an open door.”

This is a point that may have a mixed application for the leadership in Pyongyang. The Obama administration is likely to raise North Korean human rights as an issue in the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President Obama is committed to the use of diplomacy as an essential tool for addressing differences with countries that have been long-tim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Although North Korea appeared to intentionally place many obstacles in the way of potential dialogue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through its missile and nuclear provocations in the first part of 2009, Ambassador Bosworth’s visit to Pyongyang opens the way for direct bilateral engagement, even if the purpose of that engagement is ultimately to lead North Korea back to the six party talks.

At the same time the Obama administration utilizes sanctions to pressure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he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diplomacy opens the door to renewed dialogu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in mind reciprocal quid pro quos as the main framework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while the North appears to prefer a sequenced process in which their obligations are backloaded. Peace first, denuclearization, maybe later. It remains to be seen how and whether that gap can be bridged when diplomacy resumes.

Third, Obam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security that includes the desire to secure both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social and political rights as the only sustainable way to assure stability.

This theme is also double-edged for North Korea, which is strongly emphasizing development as part of its plans to achieve a “strong and powerful state” by 2012. There is little evidence of a desire for openness, given Pyongyang’s economic and political retrenchment and apparent rejection of market mechanisms in recent months.

Obama’s three principles for pursuing a just peace may provide some indication of what to expect if direct dialogue resumes. In his press conference upon his return to Seoul, Ambassador Bosworth said that “once we have been able to reconvene the six-party talks and begin to gain significant traction on denuclearization, I would expect that we will all be prepared to discuss the evolution or the negotiation of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focus on peace can be embedded in the six party proces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six party joint statement, but a new framework would have to be worked out that would presumably link peace with denuclearization.

Prior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the idea of negotiating a permanent peace regime as a prerequisite to denuclearization was easier to imagine, given that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arguably a symptom, and unresolved inter-Korean hostility and U.S.-DPRK hostility could be regarded as the underlying problem to be resolved. However,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tests, it will be hard to address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hostility without taking measures to bring the nuclear symptoms under control.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n interest in pursuing peace without also addressing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In his speech, Obama mentioned specifically his objective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made itself a direct challenger to that objective through its decision to conduct a nuclear test. Obama's efforts to take the moral high ground by moving forward on nuclear arms reductions have the effect of marginalizing the role and utility of nuclear weap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North Korea's emphasis on gaining a nuclear deterrent is a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This gap in worldview will be particularly difficult to reconcile.

If it proves to be irreconcilable, Obama's speech provides clear guidelines regarding prerequisites for pursuing a just war. Obama would be likely to seek international backing that the cause is just and would seek to pursue military action with the broadest possible multilateral support. It is notable that President Obama mentioned the Korean War as an example of a U.S.-led effort to "underwrite global security," and that he characterized these efforts as driven by "enlightened self-interest," as a means by which to preserve freedom and prosperity.

North Korea need not fear a unilateral U.S. strik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as Secretary of State Clinton has already made clear. But North Korea's position as a challenger of international norms, especially i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ctually increases the risk that if indeed North Korea shows its unwillingness to pursue denuclearization as part of a return to multilateral dialogue, that the United States under President Obama might in princi-

ple lead a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over nuclear weapons with the broadest possible back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rom this perspective, North Korea's reliance on nuclear weapons as the basis for deterring the United States actually increases rather than decreases the likelihood of conflict, with negati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capacity for regime survival as an outli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ain sticking point for President Obama in his approach to North Korea as highlighted clearly in his Nobel prize acceptance speech—is the interrelationship of just peace with North Korea with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whether the issue of a nuclear North Korea would ever be one that would motiv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ar. From this perspective, handling of the North Korea issue has the potential to ultimately test either Obama's principles underlying the idea of a just peace or his principles underlying the idea of a just war.





## Asian Perspective

Vol. 33, No. 4, 2009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Special issue o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Guest Editor: John Feffer

※ 본지는 연 4회 발간되는 학술논문집입니다.

※ 본지는 SSCI 및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 원고접수 및 문의: 민희선(02-3700-0708, queenmab@kyungnam.ac.kr)

Introduction: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 **John Feffer**

An Emerging Trend in East Asia: Military Budget Increases and Their Impact / **Zhu Feng**

China's Military Spending: Soft Rise or Hard Threat? / **Sean Chen and John Fe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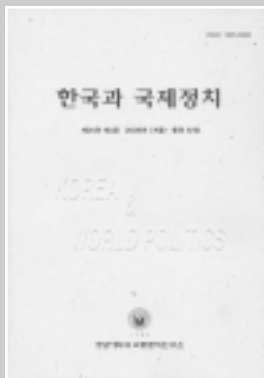
Military Spending and th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 **Chung-in Moon and Sangkeun Lee**

Allied to Race? The U.S.-Korea Alliance and Arms Race / **Jae-Jung Suh**

Japan's Military Spending at a Crossroads / **Akira Kawasaki**

Bucks for the Ba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Northeast Asian Military Spending / **Wade L. Huntley**

♣ Asian Perspective의 원문은 본 지 홈페이지(<http://asianperspective.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 제25권 제4호, 2009년(겨울) 통권 67호

발행일: 2009년 12월 30일

※ 본지는 연 4회 발간되는 학술논문집입니다.

※ 본지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 원고접수 및 문의: 김혜경(02-3700-0702, ifes@kyungnam.ac.kr)

-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 성격: 시각과 실제 /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중추적 중견국가로서의 폴란드와 국제안보제도: 안보 딜레마 극복전략과 나토(NATO) 가입 결정 배경 / 이수형 (국가안전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부교수)
-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한국 야당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평가 /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논의과정과 정당 거버넌스 / 채진원 (경희대 시간강사)
- 인터넷 감성이 온라인 향의 참여와 오프라인 시위 참여에 미친 영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조교수) · 김상돈 (고려대 사회학과 연구교수)

♣ 「한국과 국제정치」의 원문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ifes.kyungnam.ac.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참가자



김성우 (Kim Seung-woo) 김재원 (Kim Jae-won) 김성태 (Kim Seung-tae)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호 (Kim Seung-ho)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김성민 (Kim Seung-min)

#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Democrac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 일시 2010년 2월 4일(화)~5일(수)
- 장소 서울 푸리저 호텔

컨퍼런스 사무국  
경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9-7 TEL 02-3758-0758 FAX 02-3758-0757 HOMEPAGE: [ackongnam.ac.kr](http://ackongnam.ac.kr)

경남대 국제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IFES)  
미국 민주주의재단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 제 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를 개최하며

○ 컨퍼런스 개요

북한의 경제발전, 인권,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공동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민간협력의 협력적 개발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남이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분개어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은 남북간의 화해협력, 국제사회의 조율된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회 북한 국제도너(Donor)컨퍼런스는 이런 의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남대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관련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 NGO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경제지로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북한의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대총장·인문대학장 박재균

-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북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수준의 이해 증진과 국제협력 기반 확대
- 근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등 북한 관련 핵심 이슈들이 상층적 연계를 모색
- 미국을 중심으로 15여개 나라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NGO 책임자가 함께, 차등적 회의를 통해 서로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
-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모든 정부 및 민간기관, 국제기구, NGO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 내용의 공유, 평가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기회의 제공
- 미래에 북한 지원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참여자를 사이더 정보,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기회 제공
- 국제사회 및 한국 관련 주요 행위자(Actors) 사이의 협력 및 교류 강화 기회 제공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 2010년 1·2월호 (제5호)

발행인 : 박재규      편집인 : 이수훈      편집위원 : 구갑우 · 김근식 · 박후건

주소 : 110-2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42

전화 :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 ifes.kyungnam.ac.kr

※ 『한반도 포커스』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